

ICT 중소기업 정책융자사업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고경일
백석대 경상학부

A Proposal of New Policies for Rais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Sponsored Loan for ICT SMEs

Kyung-Il Khoe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정책융자사업, 정보통신진흥기금, 효과성, 효율성, 정책대안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various policies for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Government loan.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offers new 10 policies with results from analyzing a survey for the requirements of SMEs that were supported with Government loan program. Also this paper drives methods for finding new value indices and reforming formulas for quantifying some indice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introduces financing methods using K-OTC and KONEX markets and presents three portal site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sponsored loan matched to needs of an individual company. Also this paper improves the supplement points resulted from operating Government loan. In conclusion, these new policies will ra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s which are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growth in IT industry as well as IT SM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national livelihood and promoting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Key Words : Government Sponsored Loan, Fund for Promoting IT Industry, Effectiveness, Efficiency, New Policy

* 이 논문은 201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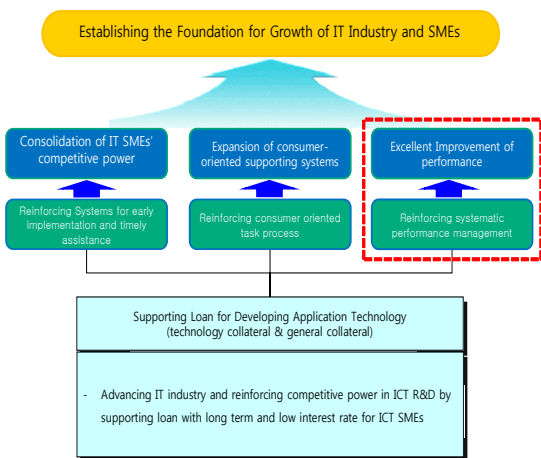
Received 28 September 2016, Revised 31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Kyung-Il Khoe(Baekseok University)
Email: kyungil@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정부는 매년 ICT분야 핵심기술의 내부화와 ICT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비R&D 예산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7년에도 국가 R&D 예산으로 19조 4천여 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CT분야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ICT산업에 특화된 재정지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그 성과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1]. 이러한 국내 ICT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기금 내 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융자 측면에서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5].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은 'IT 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IT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IT중소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활성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3,4,10,11].



[Fig. 1] Goal Plan of Promotion Fund for Government' s Supporting Loan on IT related SMEs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은 IT 및 IT기반 융합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SW·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로 다양하다. 지원 유형은 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하는 일반담보대출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서를 이용하는 기술담보대출로 구분한다. 지원 조건으로 먼저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 - 1%p)를 적용하고 있으며¹⁾,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범위의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80% 이내로 지원한도를 과제당 최고 2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3,4,10,11].

최근 들어 정부 정책융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평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PT)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증명과 성과중심의 연구관리로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혜기업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조사해왔는데, 조사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인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성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및 결과환류를 시행하여 다양한 정부 성과평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된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과 자금운용과 관련한 특화된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본론

정부의 IT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정책 중 출연(funding)은 R&D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후속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무상지원의 개념인 데 비해서 융자 및 투자 방식은 원리

1) 2016년 1/4분기 현재 1.60%

금 및 자본이익의 환원을 염두에 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융자 및 투자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2.1 융자지원정책

2.1.1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운영을 좀더 체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융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과제당 융자금 지원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012년부터 전제적인 융자사업 예산은 다시 소폭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운용 측면에서 과제당 지원금액이 20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분야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적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수과제 및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개선요구 사항은 매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48]. 우수과제 및 성공과제로 평가된 기업, 신규인원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기업 등에 대해 융자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주든지 타 정책금융 지원에 가산점을 주는 등 뜬구름잡이식이 아닌 명문화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융자지원 기업 중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 한하여 해당 상품의 양산을 위한 추가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차별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요망된다. 이러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화 성공기업을 통한 산업 성장 및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화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창업을 통한 ICT산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규창업자에 한하여 정책융자금의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등의 정책융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창업기업의 과제가 상품화 가능성 및 그 가치가 높다고 판

단된다면 창업의 장려를 위해서라도 창업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해 융자비용을 상향조정하여 책정하는 등의 지원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2].

다섯째, 청년 채용 유발을 위한 정책 융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청년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공급하는 체계를 구비하기 위해 과제선정시 청년고용 유발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여섯째, 다양한 기술분야에서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S/W 중심의 지원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정책도 검토함으로써 차세대 동력기술을 발굴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업력 오래된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융자하고 있는 일반담보의 경우라도 기술력 및 노하우 평가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라 판명된다면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우수제품에 대한 완성도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마련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내 개발기간을 1차례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융자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현실적인 요구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기업 및 과제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Q&A나 FQA 등을 통해 상시로 수혜기업과 지원기관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이외에 사업화 또는 유통망 확립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사안들을 묻고 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구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정책융자금에 접근할 수 있고 후속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2.1.2 용자사업 성과분석 평가지표 발굴 및 측정 방식 개선

본 용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분석 차원에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지표 측정방식의 개선 등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량적인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비계량지표 등의 활용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접근 방법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용자사업 성과분석 연구는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조사분석 방법을 통해 용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용자사업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특화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사업운영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성과분석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분석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용자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된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함께 얻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성과분석은 그 결과들을 활용함으로써 차후 용자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용자사업의 개선방향을 명확히 밝혀주고 정책추진 상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성과지표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용자지원으로 인한 효과를 명확히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투입 대비 산출 및 성과 간의 관계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용자지원금의 투입이 정확히 성과지표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용자금의 지원으로 인해 기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수가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법 도출을 위해 수혜기업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대안적인 성과분석방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용자사업 성과분석은 전수조사가 아닌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등 미응답 기업이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조사방법을 이용해 왔다. 이에 급된 성과분석의 경우 응답기업과 미응답기업의 2차자료(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두 기업군 간의 용자지원 전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변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등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셋째, 계량화된 평가기법 뿐 아니라 정성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함으로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잘 종합되어진 결론의 도출을 유도해야 한다. 계량분석에 의해 사업화성공률과 매출유발액 등이 작년대비 감소하였다는 것은 밝히고 있으나 감소원인은 계산방식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여러 가지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정성지표들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된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측정불가능한 성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한계점들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자지원의 결과로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 성과지표인지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야 하며, 측정이 어려운 지표일지라도 최대한 여러 가지 측정방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가장 근접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완전하게 커버될 수 없는 측정방식이라면 그로 인해 갖게 될 한계점을 밝혀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2 용자지원기업 성과 제고 및 후속지원 활성화

그동안 K-OTC시장²⁾ 및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시장³⁾과의 연계를 통해 상장요건이 충족되는 IT중소기

2) K-OTC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rea Over-The-Counter Market)의 약칭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장외 시장인 '프리보드'를 개편한 것임. K-OTC시장에서는 2014년 8월 20일 신규 지정된 56개를 포함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37개 비상장 회사(2016.09현재)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3) 코넥스(Korea New EXchange)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창업, 특히 벤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코넥스 시장이 개장하면서 2016년 9월 현재 총 132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운용됨

업에 대한 융자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2013년 7월 코넥스(Korea New EXchange)시장이 개장한 데 이어 2014년 8월 또다시 K-OTC시장이 개장하면서 중소 IT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부진이 K-OTC 시장 및 코넥스(KONEX)의 설립배경이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부채비율 역시 높아지게 되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K-OTC시장이나 코넥스 시장을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미흡도 설립배경이라 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등으로 실제로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프리보드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K-OTC시장 또한 창업 초반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K-OTC시장 및 코넥스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참가기업 수를 늘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고위험·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초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OTC시장 및 코넥스 시장은 상장요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초기의 기업들에게 융자사업과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향후 코스닥 또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코스닥(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성공사례가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4,15].

한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창업기업·우수 기술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보 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TDB (Tech Database)」(15.12월), 「기업투자정보마당」(16.2월), 「기업금융나들목」(16.6월)으로 재정비된 기업금융 활성화 3중 정보포털 라인업을 활용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 9]. 특히,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기업금융나들목”을 방문하여 맞춤형 정보검색과 온라인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컨설팅·자금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7].⁴⁾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나들목” 개편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3개 정보포털의 라인업이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보다 활발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융자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출연 및 투자사업과 함께 IT산업 내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경주해 왔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도출하면서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의 비효율과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왔음을 매년 동일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이 이어져 온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하게 해 준다.

특히, 과제당 융자금 지원한도의 확대라든지 우수제품에 대한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기간 연장, 융자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조정 등은 비교적 수월하게 그 당위성만 확보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수혜기업의

4) 지원 실적('16.5말 현재) : 총 1.12조원 (센터당 월평균 50.5억원), 수시상담 1,831건, 금융회사·벤처기업 등 네트워킹 행사 221회 개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신규창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 용자와 청년 채용 유발을 위한 정책 용자는 창업 및 청년고용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맞물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우수과제 및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사업화 성공과제에 대한 제품양산자금 추가 지원, 기술력과 노하우 갖춘 업력 오래된 기업에 대한 정책 용자 확대는 수혜기업 입장에서 성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찌감치 마련되었어야 할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다양성 측면에서의 지원 확대라든지 Q&A나 FQA 등을 통한 원활한 소통창구 조성은 사업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개선방안으로 인지되어지길 기대한다.

성과분석과 관련하여서도 단순 조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과조사 결과의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밝힌다는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에 머물지 않고 정성적인 원인들을 추가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성과 분석이 되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과제고를 위해 수혜기업 선정에 있어 K-OTC시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중용하되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지닌 영세기술기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기업금융 활성화 3중 정보포털 라인업 재정비 사업과 같이 ICT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융자금 지원정보 제공 노력은 정책의 한 축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용자사업 발전을 위한 10가지 정도의 정책제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행방안까지 도출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search Fund 2016.

REFERENCES

[1] BOK, IT statistics portal(<http://www.itstat.go.kr>)

- [2]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olitical Finance Information Portal for Start-up Company and SMEs", 2016.
- [3]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4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5.
- [4]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 [5] K. I. Khoe, "A Proposal of Alternativ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1, pp. 279-287, 2013.
- [6] K. I. Khoe, "A Research on Performances and Impact Effects of Policy Supporting Loan through Case Study on 5 IT-rela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CEO & Management Studies, Vol. 15, No. 3, pp. 249-277, 2012.
- [7] K. I. Khoe, "An Analysis on Usefulness of Supporting Loan for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and Political Proposal for Improving Outcom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 12, No. 2, pp. 271-289, 2012.
- [8]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http://www.kbiz.or.kr/>)
- [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7 National Budget and 2016~2020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2016.
- [10] NIPA, "Analysis on Performance of IT Fund for Promotion. MKE", 2013.
- [11] NIPA, "Analysis on Performance of IT Fund for Promotion". MKE, 2014.
- [12] Seong-Taek Park, Young-Ki Kim, "A Study on Patent Valuation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11, pp. 315-321, 2012.
- [13] Sungmin Park, Wonsik Sul, Kyung-II Khoe,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Funded R&D Projects with Composite Scor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5, No. 2, pp. 1259-1281, 2012.
- [14] K-OTC Homepage (<http://www.k-otc.or.kr/>)
- [15] KONEX Homepage (<http://konex.krx.co.kr/>)

고 경 일(Khoe, Kyung il)



- 2003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3년 1월 ~ 2004년 2월 : 삼성경제연구소(SERI) 금융실 연구원
- 200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금융, 외환, IT용자 성과분석, 정책금융

· E-Mail : kyungil@bu.ac.kr